



이날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한국환경자원공사 이명수 산업진흥실장은 “구조적인 장애 요인 때문에 재활용 사업자들이 경제성과 전문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면서 “현재 7백억원인 지원자금 규모를 2천억원으로 늘리고 대출이자율은 다른 업종과 같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또 “전기·전자·자동차 제품의 전 과정에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는 환경성보장제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플라스틱 유화처리시설은 아주 유용한 대체에너지로 평가받는데도 에너지 절약시설보다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재활용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3%에서 에너지 절약시설 수준인 10%로 낮춰야 한다”고도 했다.

서울시립대 이동훈 환경공학부 교수는 “생활폐기물 중 포장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본은 8.5%지만 우리는 60% 이상이나 된다”면서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포장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경상품제조협회 정우현 회장은 “재활용 제품은 신제품을 보충하는 성격이 짙어 제품 수요가 비정기적”이라면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비수기에 대량 구입해 성수기에 적정가격으로 방출시키는 가격안정화 정책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산업대 배재근 환경공학과 교수는 “현재 국내 환경 시장은 16조원 수준이지만 2010년에는 약 24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라도 재활용 산업 투자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이를 위해 재활용산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부부처의 설

립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강혜정 산업환경과장은 “다른 부서와의 업무 조정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와 업무협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부 신기술 인증 통합브랜드 NET 개편 획득시 여러 가지 혜택

올해 정부의 신기술 인증 제도가 'NET'로 전면 개편돼 최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은 최근 첫 NET 인증 신청을 받아 심사에 나섰다.

과기부의 NET 운영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지난 달 10일 마감된 신청에 1백 20여개 기업이 지원,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NET는 우수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의 약자로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건교부 환경부 등 정부 각 부처에서 관리하던 다양한 신기술 인증제도를 통합한 브랜드다.

올해부터 각종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가 신기술 부문의 'NET'와 신제품 부문의 'NEP'로 일원화되면서 NET는 신기술 부문의 대표 인증으로 자리잡게 됐다.

이 같은 NET 제도는 국내 기업이나 연구기관, 대학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해 그 우수성을 인정해줌으로써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제품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기관

새로운 NET 마크는 태극문양을 형상화한 것으로 한국의 우수한 신기술을 상징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디자인학과 임창영 교수가 이 마크를 디자인했다.

NET 인증 제도는 중복 인증 신청방지 등 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신청 시 적용기술의 정의와 범위, 신청 접수기관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증기간을 기술의 실용화 기간을 반영해 유효 인증기간과 연장기간을 합쳐 10년 이내로 통일하고 인증 받은 기업이나 기관은 관계부처 관련 법령상의 지원제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NET 마크를 획득하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신기술의 우수성을 공인받을 수 있어 기술과 제품 홍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신기술 인증을 받은 후 신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 용기 및 홍보물 등에 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기 때문이다. 또 과학기술진흥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해 시중은행에 각종 기술개발 자금 지원을 신청할 때 금리 우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신기술 구매 시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

신기술을 사업화할 때는 조세지원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부처별로 받았던 과거의 인증은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경우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유효한 기존 인증은 NET 인증을 받은 경우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기술기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기술분야별 소그룹활동을 통해 경

영정보와 의견을 교류하고 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 전략도 마련한다.

NET 인증제도는 이 같은 혜택을 바탕으로 국산 신기술의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1993년 처음 시작돼 NET에 통합된 과학기술부의 신기술인정(KT) 마크는 지난해까지 총 1972개 기술에 부여돼 국산 신기술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

서울시
일회용품 과대포장 화장품 치다
신고포장제 도입 후 적발 증가

서울시가 지난해 한해 동안 1회용품 사용 여부와 과대포장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회용품 사용 여부의 경우에는 4천39건의 시민신고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실사를 통해 총2천7백2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소가 과태료부과건의 90%, 다음으론 식품접객업이 5.6%를 차지해 이들 업종의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선물 유통이 많은 추석과 성탄절 전후에 시민단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여부를 점검한 결과, 과대포장으로 확인된 22개 제품에 대해 총 6천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종류별로는 화장품류가 절반을 차지하였고, 화장품류 중 수입품이 대부분을 차지해 화장품류를 수입할 경우 과대포장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점검결과는 2004년도 대비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신고는 1.8배, 과대포장 적발은 2.8배로 각각 증가했는데, 이는 위반행위 증가보다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한 자치구가 늘어나고 과대포장점검에 내실을 기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실효성 있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된 신고포상금제는 2004년 1월 은평구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지난해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전면 실시하고 있다.

도소매점에서의 1회용 쇼핑백 무상제공, 식품접객업소에서의 1회용 용기 사용 등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업종과 업소규모에 따라 최저 2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1회용품 사용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적발기능이 크게 향상되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납, 카드뮴 함유된 포장재 사용 규제
오는 9월부터

오는 9월부터 납과 카드뮴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함유된 포장재의 제조, 유통이 금지된다.

환경부(장관 이치범)는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사용 제한 중금속의 종류와 농도 기준 등에 관한 권장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금속 함유된 포장재는 재활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각이나 매립 때 중금속이 비산되거나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
폐건전지, 등 재활용 대상품목 추가
알칼리망간전지와 확장품유리병 등

환경부(장관 이치범)는 가정에서 주로 배출되면서 재활용되지 못했던 알칼리망간전지와 화장품유리병 등을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달 23일 입법예고 했다.

알칼리망간전지, 망간전기, 니켈수소전지 등은 가정에서 배출되고 있으나 분리수거 되지 못하고 대부분 소각·매립되고 있어 유해물질 배출 및 침출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전지류와 관련해 국민의 분리배출 요구가 증대되어 왔으며, 최근 일부 수입 전지류에서 유해물질(납, 카드뮴) 함유량이 국내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어 재활용 등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현재 폐기물부담금 품목인 화장품유리병은 환경에 유해성이 거의 없으며, 일부는 분리수거 대상에 혼입배출 되어 재활용되고 있어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체 전지 사용량중 약

정책기관

90%를 차지하고 있는 알칼리망간전지 등이 분리수거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부분의 전지류가 재활용의무대상에 포함되며, 그 동안 매립·소각 위주로 처리되었던 전지류가 상당부분 재활용됨으로써 중금속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수거된 전지류에서 유가금속 등을 회수해 부수적으로 경제적인 편익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화장품 유리병이 재활용의무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유독물 용기 외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부분의 유리병 포장재가 분리수거 대상이 돼 분리배출 품목 구분에 따른 주민 불편이 줄어들고 유리병 재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분리수거체계가 이미 구축된 화장품유리병은 2007년 1월 1일부터, 분리수거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전지류는 2007년도에 분리수거 구축사업 및 일부 지역에서 수거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에 2008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입법예고된 동 개정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후 금년 6월말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농림부 원산지 표시 의무품목 103개 늘어 무, 배추 등 날개로 팔 경우 제외

농림부(장관 박홍수)가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수를 대폭 늘리기로 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농림부가 새롭게 추가한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는 무, 배추, 양배추, 파(이상 4개 품목은 포장

된 것) 등 가정에서 많이 먹는 채소와 참외, 수박, 딸기, 복숭아, 자두, 꽃감 등 과일류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박스, 그물망, 랩 등 어떤 형태로든 포장이 이뤄지는 해당 농산물은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무나 배추를 3~5개 등 묶음 형태나 그물망에 넣어 판매할 때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종이박스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파는 참외, 딸기, 복숭아 등도 포장 겉면에 원산지가 드러나야 한다.

심상인 농림부 소비안전과장은 “다만 무나 배추 등을 날개로 팔 경우는 원산지를 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의무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공식품 중에는 빵류, 올리브유, 야자유, 냉면, 당면, 카레, 튀김식품, 밀가루, 시리얼 등이 원산지 표시품목에 추가된다.

이들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는 포장용기의 인쇄·제작 등을 감안해 1년의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다.

가공품은 특정원료가 50% 이상이면 해당 원료 원산지를, 50% 이상을 차지하는 원료가 없는 가공품은 상위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특히 모든 원재료가 국산인 경우는 ‘원료원산지 : 국산’ 식으로 표시하는 새 표기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표시제도가 혼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춧가루, 생강 등 양념은 중국산을 사용하고도 ‘배추(국산)’로 표기하면 소비자들이 자칫 이 김치의 모든 게 국산이라고 혼동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배추와 양념 등 모든 원료가 국산일 경우 ‘원료 : 국산’이라고 표기할 수 있도록 해 국

산 재료만을 사용한 김치가 다른 김치와 차별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
시판용 수입쌀 시제품 포장공개
 원산지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농림부(장관 박홍수)는 2005년분 시판용 수입쌀 2만2천5백57톤 중 미국산 중립종(20kg) 1천3백72톤이 지난 달 국내 첫 입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중에 판매될 수입쌀 종이 포장(지대)도 함께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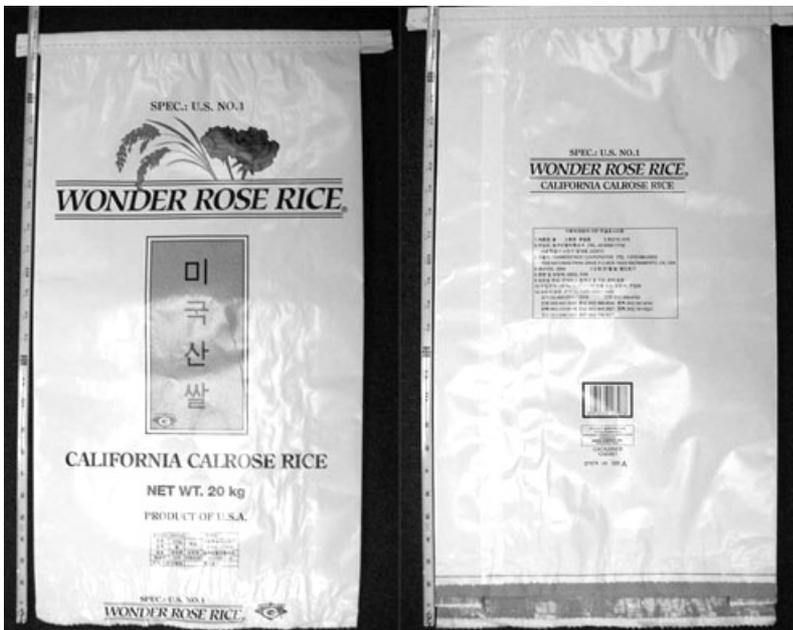
이번에 도입 물량은 미국 총 도입량 5천5백4톤 중의 일부로서 잔여물량(4천1백31톤)은 3월~4

월중으로 들여올 계획이다.

쌀 협상 결과에 따라 금년부터 시판되는 수입쌀은 미국산외에 중국산 1만2천7백67톤, 태국산 3천2백93톤, 호주산 9백93톤이다.

이들은 4월~5월 중으로 국내 들여오고, 농약 잔류검사 등 식품안전성 검사 및 품위검사 등 통관 절차를 거친 후, 4월~6월에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매가 실시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수입쌀 시판시기에 맞추어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하고, 단속반 3천1백91명, 명예감시원 1만4천7백30명을 편성, 최종 판매 단계까지 수입쌀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원산지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수입쌀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적발물량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5만원~2백만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판용 수입쌀 시제품 포장공개최

농림부
브랜드쌀 생산·유통체계 발전
 포장 양곡표시제 정착

농림부(장관 박홍수)는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지난 달 15일 박홍수 농림부장관, 김인식 농촌진흥청장, 안종운 한국농촌공사 사장, 엄성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 추진본부' 현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장관은 맛있고 안전하고 잘 팔리는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 체계를 구축해 농업인의 생산 의욕 고취와 우리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 추진본부'는 3월 15일~11월 30일까지 농림부 상황실에 설치, 고품질쌀 생산·유통 시책을 추진 할 계획이다.

고품질쌀 생산, 생산조정, 고품질증자개발·보급, RPC 계열화·유통대책, 소비촉진 홍보, 농업 재해예방·대책 등 6개 실무 대책팀에서는 주요 시책 추진상황 점검, 지도·홍보 등 단계별로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을 추진하며, 농촌진흥청, 시·도(시·군), 농협, 한국농촌공사 등에도 중앙과 지방에 6백48개소의 상황실을 운영해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대책을 영농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올해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을 위한 중점 대책을 아래와 같이 추진키로 했다.

지력증진으로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 기반 조성

을 위해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사업을 '05년 151천ha에서 '06년 170천ha로 확대하고, 규산질비료 입상 공급 비율을 '05년 59%에서 '06년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 보급종 공급 비율을 '05년 32%에서 '06년 35%로 확대하고, 3개 고품질 신품종 2백25톤(고품 10, 운광 15, 삼광 200)을 조기에 보급 할 계획이다.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조기 정착을 위해 6대 고품질 재배기술(적기이앙·적정 포기수 확보·물관리·질소비료 시용량 감축·최소 병해충방제·적기수확) 실천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들녘별로 단일품종의 재배를 유도하고 재배법도 표준화함으로써 각 지역별 대표품종과 대표브랜드의 육성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RPC의 수확후 관리 시스템 혁신을 위해 RPC의 벼 계약재배 면적을 '05년 32%에서 '06년 35%로 확대하고, RPC의 가공시설 확충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 교체 및 RPC 통폐합을 유도하고, 아울러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해 원산지 부정 유통단속, 포장 양곡표시제 정착으로 쌀 유통 질서 확립, 품종 혼입을 개선, 품질 검증기반 구축 및 소비촉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청
코팅안경 원산지 의무화 마련
 포장 봉투 봉합 의무화

식약청(청장 문창진)이 수입산 안경렌즈의 원산지가 불투명한 사례가 많다고 보고 오는 9월부터



터 코팅 안경렌즈 원산지 표시 의무화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 안경렌즈 포장봉투가 봉합이 되지 않고 개봉된 상태에서 유통되고 있어 안경렌즈 포장봉투 봉합을 의무화하는 등의 안경렌즈 허가관리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수입산 안경렌즈 불법유통 등에 대한 경찰청과 합동 단속 결과 수입산 안경렌즈 원산지가 불투명하고, 안경렌즈 포장봉투가 봉합이 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은 안경렌즈 원산지 둔갑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수입산 비코팅 안경렌즈를 국내에서 코팅하는 관행을 제도화 하는 등 수출증진에 기여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에 주안점을 두었다.

의료기기본부 류시한 팀장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경렌즈 제조, 수입업소, 안경도매업소, 안경사협회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시력보정용 안경렌즈의 99%이상이 코팅된 플라스틱렌즈이고, 일부 수입산 안경렌즈가 비 코팅 상태로 들어와서 코팅 후 국내 유통되거나, 외국에 수출 돼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식약청은 비코팅 안경렌즈를 원자재로 해 전문적으로 코팅, 포장만 하는 행위를 제조업하고 허가하지 않는 것을 제도개선하고, 비코팅 안경렌즈의 원산지 구분을 위해 오는 9월부터 안경렌즈 포장봉투에 제조원과 코팅원을 구분표시 한다.

류시한 팀장은 “제조, 수입업소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 제조, 수입되는 모든 백

색렌즈에 대해 우선 적용 한다”며 “착색렌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렌즈 색상을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착색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된 후에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구입하고자 하는 안경렌즈의 포장봉투가 봉합되어 있는지, 포장봉투가 기재되어 있는 제조원, 코팅원 등과 같은 표시사항을 꼭 확인해 줄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식약청
'아크릴로니트릴' 시험법 개선
분석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이바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관 문창진)은 아크릴로니트릴을 원료로 하는 식품용 용기.포장에 대한

'아크릴로니트릴' 용출시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크릴로니트릴'은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및 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AS) 등의 합성수지 제조시 사용되는 원료 물질로써, 우리나라 식품공전에서는 동 물질의 용출규격을 0.02mg/l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아크릴로니트릴' 용출시험법 개정(안)은 최신 분석기법을 적용해 분석 강도를 높임으로써 보다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추후 식품용 용기.포장에 대한 시험법 과학화를 통한 분석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은 본 개정(안)을 금년 상반기에 입안에 고해 의견수렴한 후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